

사회정책 전환기에 생각하는 사회연구의 역할

사회정책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결정됩니다. 새 대통령과 행정부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사회정책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내년 3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과 예비후보들은 이미 각양각색의 사회보장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가온 사회정책의 전환기입니다.

사회정책과 사회보장 분야 연구자는 정책의 수립과 개선 나아가 정책을 통해 사회문제의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제와 연구방법에 관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논문과 보고서 등의 성과물로 무장한 연구자들은 당연히 전문가로 인정받고 정책 개발과 실행에 직간접으로 기여할 만합니다. 하지만 사회정책에 관련 연구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연구결과물이 제공하는 정보와 사회정책과 제도에 유용한 정보 사이의 커다란 간극입니다. Joseph Nye 교수에 의하면, 학자들은 복잡한 수리적 모델, 새로운 연구방법론, 혹은 전문용어로 범벅이 된 연구를 바탕으로 세상에 대한 지식과 이론이 발전하고 있다고 자랑스러워 하지만 정책입안자들은 이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불평합니다. 학술연구가 현실의 정책 및 관련 쟁점과 유리된 탁상공론에 머물거나, 연구자가 아닌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언어와 소통방식으로 정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이 부족할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 승진심사와 연구 성과의 평가에서 학술지에 실는 논문의 가치를 매우 강조하는 현실이 정책과 실천현장에 별로 유용하지 않은 연구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ichael Sherraden 교수는 한 발표에서 학술연구의 90-95%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별 영향력이 없다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 수치의 제시가 인상적인데 그것이 과소평가인지 과대평가인지는 논쟁거리가 될 만합니다. 논문의 수나 SSCI 등재 학술지에의 게재와 같은 정량적 접근을 바탕으로 연구의 성과와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은 그 장점과 기여가 뚜렷하지만 분명한 한계 역시 드러내었습니다. 연구자와 심사자 모두 연구문제의 중요성과 실천적 함의, 주제와 접근방법의 독창성, 장기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의 수행에 더 큰 가치를 더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한편, 사회정책 연구와 연구자가 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는 않은데 의도와 달리

부정적일 수 있는 위험도 경계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이는 인지적 편향과 확증 편향을 가능한 피하고 직관이 아닌 실증에 근거하여 지식을 창출한다는 연구의 목적과 기능이 경시되어 발생 합니다. Alexander George의 표현을 빌면, 학자들은 연구에 기반한 합리성이 정책의 바탕임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정책결정자들은 학술 연구를 졸업도록 따분한 것으로 폄하하곤 합니다. 연구는 과학적 절차와 논리성을 강조하니 시간이 걸리고 지루하기 쉽습니다. 과학적 절차와 논리성과 객관성이 무시되면 연구가 아닌 주의주장이 됩니다. 그러니 따분함을 감내하고 꾸준히 연구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조용히 찬사를 보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정책은 흔히 정치적 과정을 여과하여 나오는 결과물이므로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합리성보다 사회적 지지나 합의가 중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정책수립, 집행, 평가, 수정의 전 과정에서 과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욕구파악에 기반한 표적집단의 선정과 정책 및 서비스의 개발, 해외사례와 문헌고찰만이 아니라 시범사업과 성과평가에서 나온 증거를 활용한 정책의 제시, 가시적이고 단기적이고 일면적인 성과만이 아니라 장기적 효과와 다차원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정부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우리 사회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관련 연구와 연구자에 대한 수요와 기대 역시 증가한 현실은 원칙에 충실한 학술연구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이번 한국사회정책 28-3호에는 총 세 편의 연구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소득분배 연구를 위한 건보공단 빅데이터의 의의와 한계”(유종성, 김민혜, 김승연, 유수진)는 주로 가계조사에 기반한 기존 연구와 달리 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단위에서 소득분배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소득분배 연구에서 건강보험자료가 갖는 장점과 한계를 기술합니다. 소득분배 연구 자료의 확장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코로나19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이승호, 홍민기)은 지난 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지급되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경제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성과를 파악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실증자료입니다. “청년 불안정성의 궤적과 유형”(김교성, 박나리)은 청년층의 고용, 소득, 부채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이를 불안정성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근래 부쩍 높아진 사회적 관심의 대상인 청년층의 생활여건과 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연구입니다.

또한 이번 호는 두 편의 서평을 실고 있습니다. 장지연 박사(한국노동연구원)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인지를 진단하고 내실 있는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 윤홍식, 정준호, 김유선, 신진옥, 김영순, 이영수, 이충권, 김도균(2020), 『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를 소개합니다. 정세은 교수(충남대 경제학과)는 사회정책의 방향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긴축정책의 역사와 이론가를 정리하고 성공 여부를 살펴본 마크 블라이스 (2016), 『긴축: 그 위험한 생각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 실린 연구논문과 서평에 대해 학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2021. 9. 30

서울대학교 **박정민**